

군대라는 거울에 비친 근대 일본 사회

가토 요코 지음, 박완 옮김, 『징병제와 근대 일본』(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을 읽고

이형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I. 한국 징병제의 위기와 일본 병역제 연구의 시사점

한국에서 징병제 논의는 늘 뜨거운 이슈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징집 대상이 되는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0년대 초반 약 60만 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대 후반에는 30~35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대에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역 자원 감소로 징집률이 사실상 100%에 이르자 남성 간 병역 공평성 논란은 다소 줄었지만, 대신 여성 병역 확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병역의 공정성 문제, 여성 징병 문제 등 징병제가 불러오는 사회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병역 자원 고갈로 인해 징병제 자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의 징병제는 제도·사상·문화 측면에서 일본의 징병제를 부분적으로 계승했고, 해방 이후에는 냉전과 국가주의적 환경 속에서 '반공 국가의 국민 형성 장치'로 재구성되었다(김동춘, 2000).¹ 이러한 점에서 70년에 걸친 일본 징병제의 궤적을 추적한 가토 요코(加藤陽子) 교수의 저서『징병제와 근대일본』은 현대 한국 징병제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저자가 도쿄대학에 부임하고 나서 출판한 첫 저서이다. 한국에도 많은 독자를 지닌 저자의 초

¹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0.

기 저작에 속한다. 본 저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패전까지 70년 이상 지속되다가 패전과 함께 폐지된 징병제의 성립부터 개정 과정을 통사적으로 검토하며, 징병제가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 국민 통합의 핵심 장치였음을 밝히려 한 연구이다.

II. 국가·군대·국민을 잇는 병역 시스템: 저자의 세 가지 문제 제기

저자는 징병제 문제를 거론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일본 군대의 '부조리' 문제를 들고 있다.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하던 이들이 징집 또는 소집을 통해 갑자기 병사가 되어 전장으로 나가 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며, 타국 민중을 굶주리게 하고 자신도 굶주린 채 황량한 전장을 떠돌아야 했던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징병제를 운용한 국가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자 했다. 두 번째로 징병제와 지원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병제와 비교하여 일본의 특이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의 병력 징집률이 79%에 달해 다수의 국민 남성을 포괄하고 관리하는 징병제 군대를 살펴보는 것은 일본 국민 자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책임을 논할 때 국민의 사회성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석 관점으로 다시 세 가지 분석시각을 제시한다. 먼저, 건국 초기에 어떠한 생각으로 징집할 인원을 정하고 현역 병역 연한을 결정하며 어떠한 병사를 모으고자 하였는가 하는 징병제의 첫걸음에 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저자는 정부가 군 내부에서 양성될지도 모르는 혁명을 압살하기 위해 군기로서 엄격한 규율과 징벌을 갖출 필요에 쫓겼고, 엄격한 군기에 속박된 참담한 농민 병사가 대외 침략으로 내몰렸다는 일본 징병제 성격에 관한 강좌파적인 해석을 창설 시부터 패전기까지의 징병령, 병역법에 관한 심의 과정,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국민과 군부를 이어주는 창구로서의 징병제에 주목하여 일본 육군이 징병제를 통해 ‘공평,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육군과 국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징병제 연구가 성립기 연구와 태평양전쟁 시기에 집중되어 다이쇼 시대, 쇼와 초기, 개전 후에 겪은 변화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현황을 비판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징병 사상과 징병제의 변천에 주목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등 연이은 실전 경험에 근거하여 변혁된 근대 편제 관념 및 용병 사상 변화, 나아가 징병제의 기본 사상의 변천을 밝히고자 했다.

III. 일본 징병제의 변천사: 제도 개정과 전시 동원의 확대

1873년 징병령 성립 이후 수많은 개정 과정이 있었고, 본서는 그 시기별 개정 경과, 지방의 상황,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했다. 시기별 개정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무미건조할 뿐 아니라 지면상의 제약도 있어 법령의 변천에 따라 크게 징병령시대, 신징병령시대, 병역법시대, 중일전쟁 이후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먼저 1873년 징병령 제정 당시 실제 징집병 수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 육군은 “병을 세로로 길러 옆으로 사용한다”는 발상 아래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지원병제 도입을 거부하고, 국민개병 원칙을 고수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평시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유지하면서도 전시에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 육군은 징모 대상자를 넓히되 실제 징집 인원은 크게 늘리지 않으므로 소수의 정예 병사를 선발하고, 그 가운데서 하사관·사관을 ‘선발·발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후 징병령 개정 과정에서 징병면제 조항을 줄여나간 이유는 병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징모 인원을 확보해 그중 우수한 병사를 뽑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일본의 징병제는 우수한 현역병을 선발해 교육한 뒤, 현역 복무가 끝나면 예비역으

로 축적해 전시에 대규모로 일시에 동원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심한 ‘신진 교환’ 방식의 교육과 국가 측의 선택권을 중시한 운영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징병제와도 다른 일본의 독자적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초기 징병제는 대체징병료를 납부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학생·관료·사족 등에게도 다양한 유예·면제 조항이 있어 병역 부담이 농민·빈민층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후 징병령을 개정하여 빈곤층의 징집을 유예하고 대체징병료를 폐지하는 등 면제 조항을 점차 정비하면서, 1889년 메이지 헌법 제20조의 병역의무 조항을 통해 ‘국민개병’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1889년 신징병령 이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보충병역 창설과 예비역 복무 연장, 러일전쟁에서 후비역 확대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전쟁 이후에는 재향군인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이어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고조된 반진·반징병 여론, 그리고 총력전 체제 구상에 대한 육군의 대응을 분석한다. 특히 육군은 서구 각국의 청년 교육 실태와 고학력자의 활약에서 자극을 받아 ‘특권 폐지·균질화’를 추구하고, 1918년 개정 이후 징병 연령 이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7년 병역법이 제정되었는데, 저자는 이를 일본 징병제 변천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이 법은 현역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예비역·보충역 제도를 세분화하고 강화하여, 평시 상비군을 축소하면서도 전시에는 대량·신속 동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병과병주의(精兵募兵主義)’를 수정하고 ‘다병주의’를 도입한 조치로, 병사의 질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훈련소와 군사교육을 결합하는 등 총력전 체제에 적합한 동원 시스템을 갖추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1927년 병역법 이후 패전까지 큰 폭의 개정은 없었지만, 만주사변 이후 동원 체제 변화, 중일전쟁의 장기전 대응을 위한 3단위 사단 창설, 1941년의 재류징집주의 도입 등 전시 확대 국면에 맞춘 조정이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1943년에는 징병제의 적용을 조선·대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유예 대상이던 대학생까지 사실상 징집했으며, 1945년 의용병역법 공포로 여성까지 ‘국민의용전투대’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동원하였다. 저

자는 제국 일본이 “모두가 똑같이 불행을 겪어야 고통이 완화된다”는 심리를 이용해 조세·동원 부담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전시 동원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IV. 근대 일본 징병제를 다시 읽다:

제도·군사사상·국민사회의 교차점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살피기 위해서는 일본의 선행연구를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전후 일본의 근대 군사사 연구는 주로 육군의 대륙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정군관계사(政軍關係史)에 집중되어 발전해 왔다. 군대와 징병제에 관한 연구도 일정한 축적은 있었으나, 근대 일본군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징병제는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1980년 2월 7일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간사이 재계 세미나에서 간사이경제연합회 회장이자 스미토모금속공업 사장인 휴가 호우사이(日向方齊)가 “정부는 징병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여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일부 재계 인사와 우익 저널리즘이 징병제 부활을 주장하고 일본의 군비 증강과 연계된 논의를 촉발하자,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와 요시다 유타카(吉田裕) 등 군사사 연구자들은 징병제 부활에 반대하고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듬해 대중서를 출판하였다.

강좌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들 연구자는 징병제는 본래 국민개병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농민에 대한 부역에 가까운 제도이며, 구 일본군은 농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형성된 군대이므로 구조적으로 반혁명적이고 필연적으로 대외침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은 ‘악명 높다’고 평가되는 군대 내 사적 제재, 일본군의 비인간적·비합리적 측면, 병역 부담의 불공평성, 오키나와 출신자 및 부락민에 대한 차별 등 일본군의 부정적 특질을 해명하는 데 맞추어졌다(大江志乃夫, 1981).² 또한 병역 면제 조항의 불공평

² 大江志乃夫, 『徴兵制』, 岩波書店, 1981; 吉田裕, 『徴兵制』, 學習の友社, 1981.

성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병역 회피, 징병 거부, 반군사상 운동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징병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지배하던 시대적 분위기는 당시 연구 경향에도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군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징병제의 성립·개정·해체 과정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본 저서는 징병제를 국민과 군대를 매개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1873년 징병령의 성립부터 패전에 이르는 해체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육군·제국의회·국민 여론이 징병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를 전개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각 시기의 징병령 및 병역법이 어떠한 경로로 입안·심의·제정되었는지, 그리고 군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징병령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를 밝힘으로써, 근대 일본 징병제의 제도적 전개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 군사제도사 연구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저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징병제가 ‘공평’과 ‘평등’이라는 원리를 내세움으로써 국가 동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관련 법령, 방대한 사료, 각종 통계 자료에 기초한 본 연구는 일본 근대 병역제도를 제도사 및 정책사적 층위에서 정밀하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둘째로, 저서는 일본 육군이 징병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의도·제도 구상·군사사상을 품고 있었는지를 치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일본 육군은 “병을 세로로 길러서 옆으로 사용한다”는 발상 아래,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지원병제 도입론을 부정하고 국민개병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시에는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되 전시에는 대량의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육군은 부자·고학력자에 대한 면제 축소 등 징병 대상자(분모)의 확대를 중시하면서도, 실제 현역병 징집 규모(분자)는 크게 늘리지 않음으로써, 제한된 인원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재량(자유)’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즉 면제 조항을 축소한 이유는 단순히 병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병역의 공평·평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가능한 한 넓은 풀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병사를 선발하려는 제도적

재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정병과병주의’로 대표되는 일본 육군의 ‘군사적 합리성’ 추구와 맞닿아 있다. 저자는 일본 육군이 징병 부담 자체를 경감하기보다는 면제 조항을 축소하여 부담의 ‘공평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불만을 완화하고,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 병역세 도입 반대, 현역병을 위한 군사원호 제도의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사적 합리성과 국민적 지지 확보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키려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징병제 개정으로 면제 조항을 줄여 나간 일본 육군이 “부담의 경감이 아니라 부담의 공평화가 사람들의 불만·증오·질투를 해소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사람의 미묘한 감정(人情の機微)’, 즉 국민 감정의 섬세한 작동 방식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육군에 대한 국민적 호감과 수용성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이는 근대 일본 육군이 제도 개정 과정에서 단순한 군사적 논리뿐 아니라 국민 감정과 사회적 정당성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했음을 드러내는 분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셋째로, 본 저서는 징병제를 국민과 군대를 매개하는 제도적 창구라는 관점에서 일본 육군과 국민의 관계를 재해석하였다. 저자는 육군이 징병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의 확보를 위해 의무 부담의 ‘공정성’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음을 규명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징병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징병제가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서 장기간 유지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본 저서는 군대와 국민의 관계를 저항·마찰·대립의 관점만이 아니라, 수용·침투·정당화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징병제가 근대 일본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를 해명하였다.

V. ‘공정성’의 그림자: 제도 중심 분석이 비껴간 현실과 제국의 문제들

이처럼 본 저서는 출판된 지 근 30년이 지났음에도 일본 징병제를 둘러싼 군

사제도사 연구의 사실상 결정판으로 평가되며, 군사사 연구자라면 반드시 참조해야 할 필독서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한 권의 저작에 일본 징병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서술의 균형과 설명의 깊이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본서는 징병제를 제도적·법제적·관료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접근이 병역의 사회적 작동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자는 입법 과정과 법령 개정의 논리, 그리고 관료적 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징병제의 운영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징병제가 사회에 침투하고 일상의 경험으로 자리 잡는 구체적 양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징집 대상이었던 민중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미시적·경험적 차원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그 결과, 징병제의 정당화와 유지가 제도 내부의 논리에 의해 설명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개인의 행위성과 감정은 구조적 맥락 속에 부분적으로 흡수된다.

특히 징병 거부나 탈영과 같이 적극적인 저항뿐 아니라, 징병 기피, 훈련 불참, 지연, 불만의 은밀한 표현과 같은 미시적·일상적 비순응 역시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에도 본서는 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징병 관계 법령의 변화뿐 아니라 그 운용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사회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검토했다더라면, 징병제가 ‘사회적 제도’로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당화되고 내면화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설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일본 징병제 연구의 고전으로서 여전히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다층적으로 해명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저자는 징병제 개정을 병역 부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이전까지 구조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공정성’ 담론이 지닌 한계와 그 허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 저자는 면제 조항 축소와 징집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가 점차 공정성을 획득하며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징집률의 추이를 보면 이러한 설명과 괴리가 존재한다. 징병령 시

행 초기의 징집률은 약 0.3%(30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청일전쟁 이후 약 10%, 러일전쟁 이후 약 20%,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이르러서야 약 50% 수준에 도달하였다. 사실상 보편적 징병에 가까운 동원이 이루어진 것은 전황이 극도로 악화된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였으며, 이는 제도의 성숙보다는 ‘씩쓸이 동원’에 따른 강제적 평준화의 결과였다. 따라서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저학력·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병역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편향이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자는 ‘공정성’의 사례로 1944년 3월 징집된 도쿄제국대학 정치학 조교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언급을 인용하며, 군대가 신분·계급·재산·학력과 무관하게 개인을 ‘평등화’하고 능력에 따라 출세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유사 데모크라시’를 구현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전시 말기의 예외적 동원 상황 속에서만 가능했던 현상이며, 징병제 70년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마루야마는 평양 주둔 육군 이등병으로 복무하며, 중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조선인 일등병에게 집요한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병영 생활의 체험은 이후 그의 정치학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억압의 이양’(transference of oppression)을 사유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징병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서술은 제도의 실제 작동과 사회적 차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이상화된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섰지만 실제로 병역 부담은 여전히 경제적·사회적 계급에 따라 매우 불공평했다. 제 병역 부담은 경제적·사회적 계층에 따라 여전히 현저한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역적 차이(농촌·도시), 계층적 차이(농민·산업노동자·상류층), 직업적 차이는 구조적으로 존재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본 육군이 과연 국민적 지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저자의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확장한 연구로는 이치노세 도시야(一ノ瀬俊也)의 『근대 일본의 징병제와 사회』(2004)를 들 수 있다. 이치노세는 징병제의 정당화와 지속을 가능하게 한 구체적 서브시스템으로서 군사원호 제도에 주목하였다(一ノ瀬俊也, 2004).³

이치노세에 따르면, 군사원호는 병사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제공하여 장정들이 '후환 없이' 전쟁에 전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가적 장치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 군사원호를 국가가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으며, 생활 보상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징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징집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징집 대상자가 군 복무에 '안심하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관리 장치로 기능하였다. 그 결과 러일전쟁 이후 예비역과 후비역을 포함하면 최대 17년 4개월에 이르는 장기적 병역 부담이 농민, 노동자 청년층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는 병역 부담의 구조적 불평등을 결코 해소하지 못했다. 저자가 강조한, "부담 내용의 경감이 아니라 부담의 공평화가 불만·증오·질투를 해소한다"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역시 실증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징병제의 정당화 논리는 제도적 담론과는 달리 사회 현실의 불평등 구조와 복잡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서는 메이지·다이쇼 시기에는 정치하고 세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쇼와 시기로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기술이 간략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제국 일본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적 의의를 지니는 조선인·대만인의 징병·징용 문제를 주변적으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선과 대만에서 시행된 육군특별지원제도(조선 1938년, 대만 1942년), 해군특별지원병제도(1943년), 학도출진(1943년), 징병제 시행, 그리고 국민의용령(1945년) 등은 일본의 병역체계가 본토를 넘어 제국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이자, 제도적 '평등'의 담론이 식민지의 법적·사회적 불평등(참정권 부재, 호적 이동 제한 등)과 병존한 대표적 장면들이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결과, 본서의 논의는 일본 '내부'의 국가 통합 서사에 상대적으로 머물게 된다. 물론 당시 연구 환경에서 제국 전역을 아우르는 분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식민지에서의 징병·징용 문제는 전후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에도 연속성을 갖는 동시에, 오늘날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연구 영

3 一ノ瀬俊也, 『近代日本の徴兵制と社会』, 吉川弘文館, 2004.

역이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일본 연구자들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여 집필된 만큼 학술적 성취가 탁월하나, 군사제도가 특유의 용어와 개념이 다수 등장하여 일본 근대사 전공자인 평자에게도 적지 않은 독해의 난이도를 요구하였다. 번역자가 한국 독자를 위해 충실한 번역자주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으나, 미주 처리 방식으로 인해 실제 독서 과정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주를 각주로, 원주를 미주로 배치했다라면 가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이 본서는 징병제를 매개로 근대 일본 국가가 어떻게 통치의 합리성을 구축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를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징병제가 생산한 불평등과 폭력, 그리고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당사자들—특히 식민지인의 목소리—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향후 연구는 제도사적 접근을 넘어 생활사·젠더사·제국사적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징병제가 일본 사회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한 파괴했는지를 보다 다층적·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5년 11월 24일 |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일

참고문헌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파주: 돌베개.
 一ノ瀬俊也. 2004. 『近代日本の徴兵制と社会』. 東京: 吉川弘文館.
 大江志乃夫. 1981. 『徴兵制』. 岩波書店.
 吉田裕. 1981. 『徴兵制』. 東京: 學習の友社.

